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핵심어: 경제 불안, 자유무역협정, 거대자유무역협정, 글로벌가치사슬, 멕시코, 칠레, 페루,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I. 불확실성이 커지는 라틴아메리카 경제

1) 세계경기 침체와 라틴아메리카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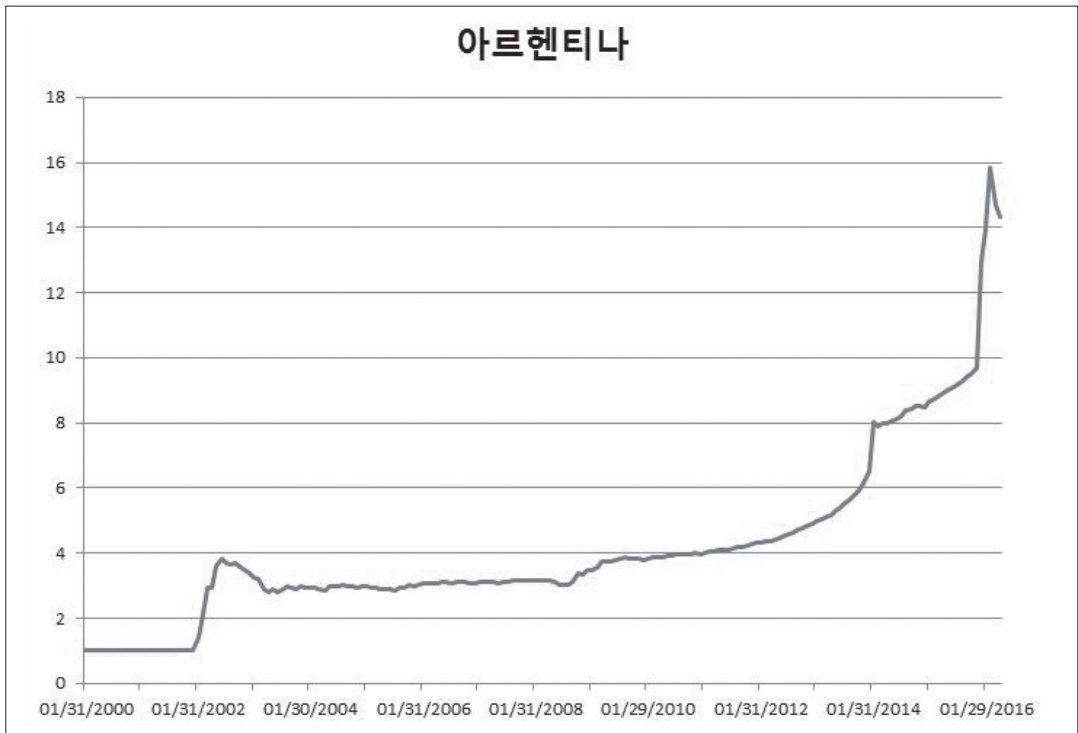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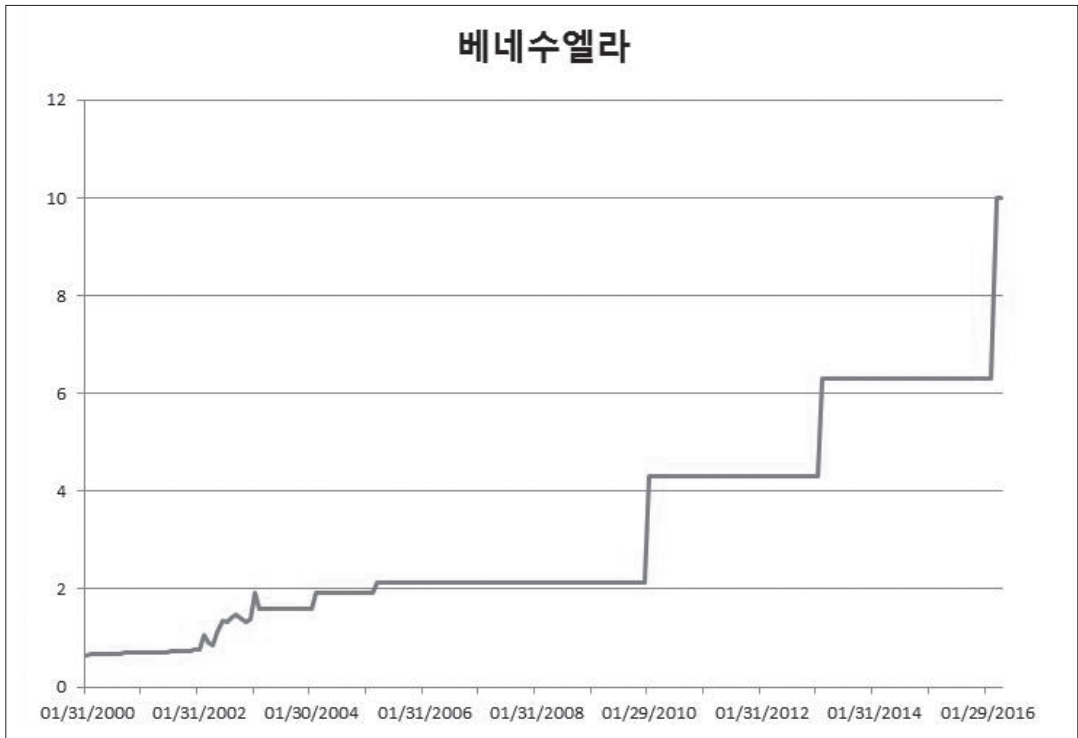
세계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시작된 소비와 투자 위축이 별다른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줄곧 두 자릿 수를 기록하던 세계교역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3% 수준에 머물 정도로 세계 각국이 경제 활력을 잃어가는 추세다. 이와 같은 세계경기 부진은 자원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곧바로 충격을 주었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미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외환시장에서 잘 드러난다. 이미 3년 가까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 이어 브라질과 콜롬비아도 위험 국가군에 바짝 다가섰다. 각국 통화가치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소폭 회복되면서 다소 안정되기는 했으나 2000년은 물론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절하 폭이 더 컸다.(<그림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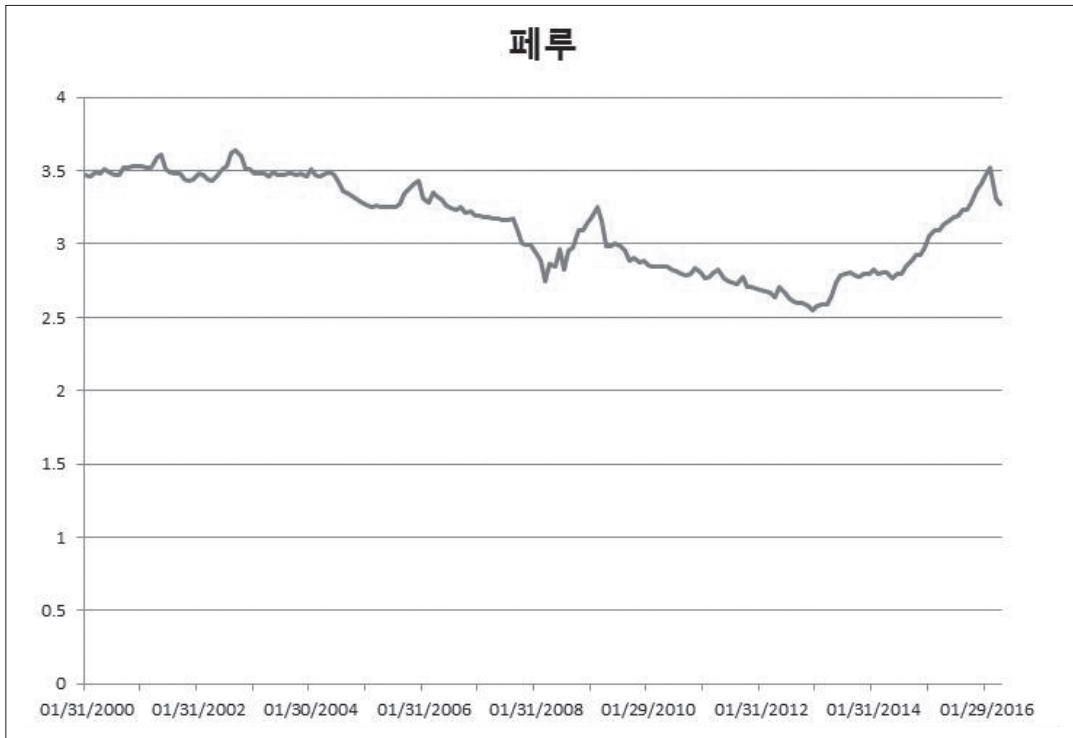
경제 불안이 심화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 역시 높아지고 있다. 2년 전 200bp에도 못 미쳤던 브라질의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2015년 하반기 한때 500bp까지 치솟았고,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도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양적 완화 기조 속에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각국의 기준 금리도 지난 2년간 계속 높아져 왔다.

<그림1>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환율 추이(달러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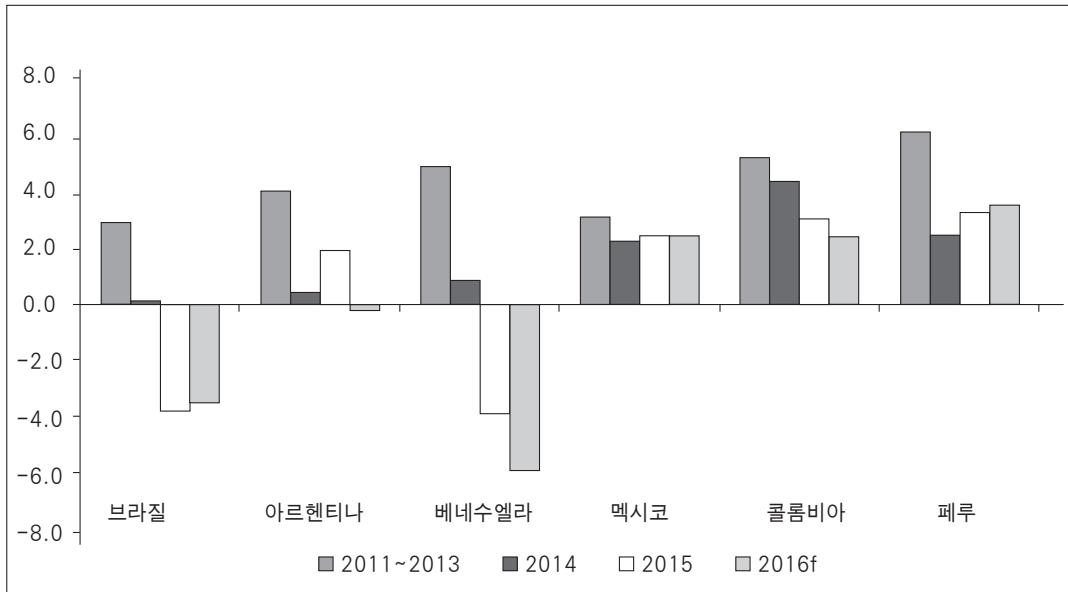




이에 비해, 멕시코와 페루는 경제 지표 면에서 조금 더 건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나 금리 상승 폭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경제성장 면에서도 다른 4개국과 사뭇 대조적인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달리 멕시코와 페루는 작년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그림2〉 참고). 경제 환경이나 산업구조는 비슷하지만 비교적 안정된 정치상황에 힘입어 정책결정과 외국인투자 유치 측면에서 더 유리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멕시코 등 일부를 제외하고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경제적 난관에 처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세계경제 환경변화라는 불가피한 변수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데 반해 유럽 경제의 반등은 여전히 요원하다.

〈그림2〉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



또한 자원 부국의 중요한 고객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출 물량 감소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출구전략 시작, 즉 금리인상으로 달러화 가치가 두 자릿수 이상 절상되면서 대부분 신흥국 통화가 외환시장에서 인기를 잃게 되었고,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외환 상황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열악한 재정구조도 문제다. 상당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원자재 수출이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운용 면에서 탈시장경제 색채를 강화해 온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는 물론이고 브라질과 멕시코 역시 브라질석유공사(Petrobras), 멕시코국영석유회사(PEMEX) 등 국영석유회사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의 기여도가 절대적이다. 자원 가격이 고공행진 하던 2000년대 중반까지는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각국 정부의 재정수입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또한 경기 둔화로 실업연금 등

복지 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유가 시기에 확장적으로 설계된 사회복지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가 올라 국공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자 일부 연금과 공무원 임금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 여파로 각국의 내수시장도 함께 얼어붙었다.

재정적자 역시 크게 늘어났다. 브라질의 경우, 2008~2012년 평균 GDP 대비 2.6%에 그쳤던 재정적자가 2015년에는 9.3%까지 늘어났으며, 그 결과 올해 말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76.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 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에 별로 기여하지 못해왔다는 점이다. 브라질 재정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총예산의 45% 정도가 부채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위해 쓰이고, 사회보장과 사회적 지원을 위한 고정 지출이 각각 22%와 28%에 달한다. 즉, 브라질 정부가 경기 상황이나 정책 목표에 따라 신축적으로 집행할만한 예산 여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려면 정부 지출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과 사회복지 지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비로 1년 가까이 국정 마비 상태인 브라질은 물론이고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파나마 문건(Panama Papers)¹⁾ 공개로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아르헨티나, 대통령 불신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환 절차가 개시된 베네수엘라 등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정치 불안이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다.

1)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 건의 비밀문서로, 2015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폭로했다. 이 문건에는 정부 고위관료, 유명인 등 전 세계 부유층의 탈세와 재산 은닉 정보가 담겨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전직 대통령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 및 현직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도 이 명단에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2) 경제 위협 증폭하는 정치 불안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경제적 혼란은 몇몇 부분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첫 번째 변화는 라틴아메리카 전반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이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친기업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을 당선시킨 아르헨티나는 물론이고,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 동맹의 맹주를 자처하던 베네수엘라에서도 2013년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 출범 이후 우고 차베스식 보편적 복지 기조 대신 선별적 복지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라울 카스트로가 이끄는 쿠바도 미국과 수교 재개를 계기로 빠르게 문호를 개방하는 추세다. 사회주의 색채가 줄어들고 시장경제 질서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우경화’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두 번째로, 과거에 비해 경제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물가상승률, 30~50%대를 훌쩍 넘던 시중 금리 등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경기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완화됐지만, 그 추세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서 반등과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고 오랫동안 자급적 내수시장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과거처럼 외부의 충격에 힘없이 노출되어 무너지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제조업 경쟁력이나 혁신 산업 역량과 같은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결과다.

세 번째 특징은 중산층이 아직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라틴아메리카의 중산층 비중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브라질로, 2002년 38%에서 2012년 53%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난 중산층 중 상당수가 생산성에 기반한 소득증가보다는 정부의 각종 보조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인구구조 변화 등에 힘입은 결과라는 점이 문제다. 재정 악화와 제도 변화로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쉽게 붕괴될 수밖에 없는 탓

이다. 즉, 중산층의 부상을 전제로 한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전략이 더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네 번째로 기억할 부분은 최근 정치적·경제적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모두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사실이다. 즉,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만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온전히 자리 잡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정치적 무질서와 사회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각종 보조금과 복지제도에 대한 약속을 선거 때마다 남발하여 재정 악화를 심화했다는 지적도 많다.

II. 국제 통상질서 재편과 TPP 부상

1) 현황 및 특징

이처럼 라틴아메리카 내부의 정치·경제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라틴아메리카를 둘러싼 국제 통상질서도 변화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 간 무역자유화 움직임,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을 비롯한 거대자유무역협정(Mega FTA)의 부상이다.

TPP는 멕시코, 페루, 칠레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뿐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태평양 주변 12개 국가의 경제협력과 무역자유화 촉진을 목표로 추진된 경제협력체로, 2015년 10월 4일 전격 타결된 데 이어 2016년 2월 4일 협정문에 대한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이제 각 회원국의 국내 비준 절차만 통과하면 전 세계 GDP 약 40% 규모의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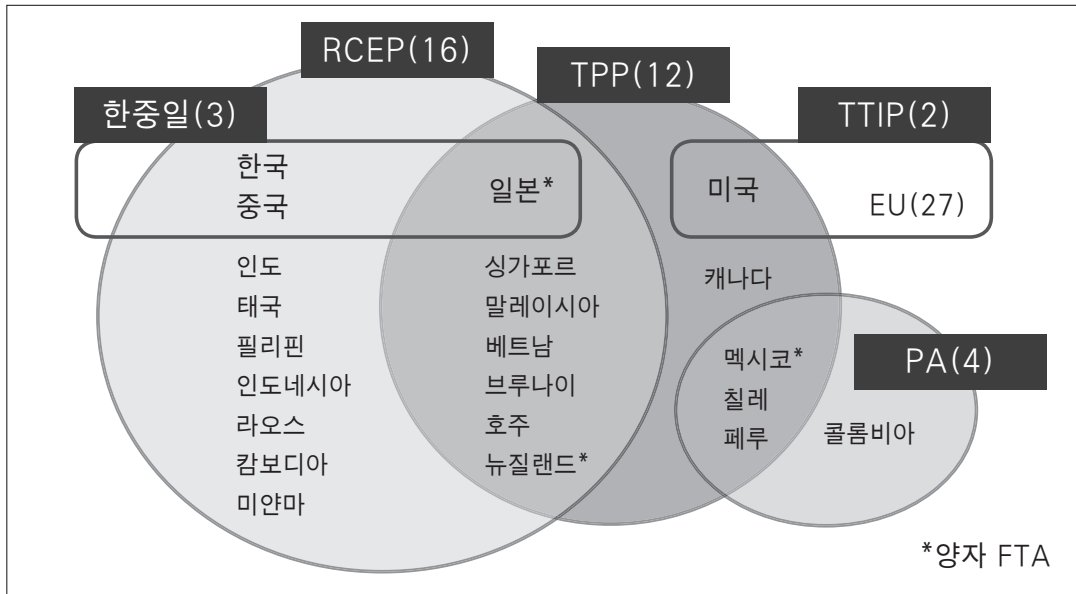
대부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응이 그렇듯이, TPP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에 신규 수요창출과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부터,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앞세워 역외 후발 국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회원국만의 잔치’라는 혹평,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숙명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엇갈리는 논란에도, TPP 타결을 계기로 세계 통상환경의 지형 변화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얼마 전까지 늘 경제통합과 개방 논의에 소극적이던 일본의 극적인 태도 변화나 미국이 보여준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타결 의지 등에 비춰볼 때, TPP는 일회성 이벤트라기보다는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에 가깝다.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이 세계무역 질서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 것처럼 TPP 역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시대에서 다자 간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물론 통상질서와 같은 큰 흐름이 일부 선진국 통상 관료들이 사전적으로 주도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산업기술 발달로 무역 현장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갈등이나 비효율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노력들이 쌓여 서서히 만들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TPP 타결과 다자 간 무역자유화의 부상은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대세로 자리 잡아온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간 거대자유무역협정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기존에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북미자유무역협정,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경제블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국경을 맞대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중심이었다. 그에 반해 TPP는 거리가 멀고 이질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여러 국가가 서로의 경제를 통합하겠다고 나선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그림3〉 전 세계 거대자유무역협정 체결 경쟁 현황



출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근 동향 및 대응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4월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것은 지난 20여 년 사이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3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여러 국가와 체결한 상이한 자유무역협정 규정으로 말미암아 스파게티볼 효과²⁾가 심해지면서 상대 국가로부터 받아들인 각종 양허(concession)의 차별적인 특혜 효과가 상당 부분 감소한 탓이다. 반면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국가 간 생산 분업 심화로 글로벌가치사슬³⁾이 복잡해지면서 원산

2)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협정마다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이 달라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하고, 결국 당초 기대한 거래비용 절감 및 무역 확대 효과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3) 가치사슬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구상 및 기획 단계부터 생산, 소비자에게 전달, 사용과 폐기에 이르는 전범위의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가치사슬이 운송·통신 수단 발달로 글로벌한 범위에 걸쳐 형성되면서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규정이나 표준, 통관 절차 등의 제도를 여러 나라가 공유할 때 얻을 수 있는 이 점은 계속해서 커져 왔다. 부가가치기준 무역(Trade in Value Added)의 중요성 부각,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물류비용 하락, 제조업의 소프트화 등도 이런 추세에 한몫했다. 이와 같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의 약점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쌓여 '다자 간 거대 자유무역협정 확산'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셈이다. TPP 초기 출발부터 최종 타결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세계 통상 질서 변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실에 모습을 드러냈는지 짐작할 수 있다.

2) TPP 부상의 배경

TPP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부터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TPP의 첫 시작은 지난 2005년 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등 태평양 연안 4개국인 자신들의 약점, 즉 네 나라를 모두 합해도 전 세계 GDP의 1%에 못 미치는 작은 경제 규모와 천연가스, 농축산업, 구리, 서비스업 등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4(Pacific 4) 협상을 개시하면서 시작됐다. 전체가 하나의 경제통합 단위로 묶이면 개별 국가의 약점을 적잖은 시너지 효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소규모 경제블록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협상을 시작한 후에도 한동안 별 관심을 끌지 못했던 P4는 2008년에 미국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TPP로 이름을 바꿨고, 통합과 개방 범위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새로 진행함에 따라 전 세계 통상담당자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후 호주, 페루, 베트남 등이 연이어 동참했고,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를 뒤따라 2013년에는 일본이 협상 참가를 선언하면서 현재와 같은 12개 회원국 체제가 만들어졌다.

〈표1〉 TPP 회원국 현황 및 주요 일정

참여국	GDP(억 달러)	인구(만 명)	TPP 내 GDP 비중(%)
미국	179,682	32,141	65.4
캐나다	15,728	3,580	5.7
멕시코	11,615	12,109	4.2
칠레	2,400	1,801	0.9
페루	1,799	3,191	0.7
일본	41,162	12,673	15.0
말레이시아	3,135	3,112	1.1
싱가포르	2,940	552	1.1
베트남	1,988	9,158	0.7
브루나이	116	42	0.0
호주	12,408	2,403	4.5
뉴질랜드	1,706	462	0.6
전체	274,679	81,224	100

주) 2014년 기준

자료: Global Insight

이처럼 TPP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주요 원인은 글로벌가치사슬 세분화와 국가 간 생산 분업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초, BRICs와 신흥경제권⁴⁾이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해당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제조업체의 해외 생산기지 조정 및 확대 움직임으로 이어졌으며, 2~3개 단계에 불과하던 국가 간 생산 분업 공정이 점점 더 세분되고 정교해지는 결과

4) 신흥경제권(Emerging Market Economy)은 학술적으로 합의하거나 정의(definition)된 개념은 아니지만 언론 등을 통해 폭넓게 쓰이는 표현이다. 통상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후발 경제권 국가들 중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세계경제 편입에 성공한 나라들을 통칭한다.

를 낳았다. 인건비, 임대료 등 요소가격 인하와 통화 약세를 앞세워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찾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국가별 분업 확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통합 확대로 투자 및 교역 장벽이 낮아지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등 디지털 재화의 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도 상품 생산의 국가별 분업을 더욱 촉진했다.

이와 같은 국가 간 생산 분업 단계의 세분화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 즉 해당 상품의 전체 부가가치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자유무역협정 참여국 내에서 만든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글로벌 생산 분업 단계가 나날수록 개별 국가가 기여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고기나 오렌지, 수산물처럼 한 나라 안에서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는 상품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라 하더라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일수록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생산에 필요한 여러 요소를 다양한 나라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전체 부가가치에서 최종 수출국이 기여하는 몫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혜택에 필요한 원산지 비율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았고, 이런 변화가 복수의 국가끼리 누적원산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다자 간 거대자유무역협정의 출현을 불러온 것이다. 표준이나 통관 절차 등을 여러 나라가 공유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도 계속 커져 왔다.

산업기술과 생산방식 변화 역시 이런 움직임을 더욱 부추겼다. 상품의 경박단소화가 빨라지고 상품 전체 부가가치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시장 접근이나 물류 전략이 더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생산 방식 측면에서도 각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간 생산분업’이 늘어나면서 글로벌가치사슬 영

향을 받는 업종이 확대되는 추세다. 경쟁 기업이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 기반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를 통해 생산비용을 낮추고 시장 접근을 개선해 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사업 방식을 고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가치사슬 확대처럼 개별 국가 입장에서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앞다퉀 진행된 산업기술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개별 기업 차원의 전략 변화가 맞물려 서로 밀고 당기면서 거대자유무역협정 체결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 환경이 불공정하게 작용해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무역대표부 인터넷 사이트의 TPP 관련 페이지에는 ‘TPP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해 운동장 높이를 고르게(leveling), 즉 경쟁 환경을 공정하게 만든다’는 구호가 등장한다.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노동 착취, 환경 파괴, 정부 지원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국가가 적지 않으며,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해 게임의 룰 내에서 정당하게 일하는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가 돌아온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TPP가 이런 불공정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세자유화 일정뿐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협정문에 포함했다.

아울러,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줄곧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세계교역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3% 수준에 머무는 부진한 상황이 지속된 것도 다소 천천히 진행되던 TPP 협상 속도를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와 투자 수요가 함께 위축된 데다 자원 수요마저 크게 줄어들어 위기의식이 커진 탓이다. 더군다나 부족해진 수요를 두고 전 세계 기업이 가격 경쟁을 벌임에 따라 물량과 금액 모든 면에서 교역 규모가 위축됐고, 이런 변화가 통상 환경과 협상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도

한몫했다. 동아시아 지역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무게 중심이 중국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정학적·지경학적 경쟁자인 미국과 일본의 위기의식이 커졌다는 풀이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TPP 역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같은 다른 거대자유무역협정의 추진 속도 제고와 다자 간 무역자유화 움직임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EU 자유무역협정, 한중자유무역협정 등을 촉발했던 것처럼 TPP 타결을 계기로 한·중·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유럽과 미국 사이의 경제통합 움직임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협상 역시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다자 간 거대자유무역협정마다 형태와 특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각 자유무역협정 별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양하고 적합한 산업이 다르다는 의미다. 거대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목적이 역내 회원국 기업 및 관련 글로벌가치사슬의 국제 경쟁력 강화인 만큼 각국의 경쟁우위나 주력산업의 특성에 따라 관세장벽 제거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비관세장벽을 강조할 것인지, 혹은 전통 제조업과 미래형 제조업 중 어느 산업에 유리한 자유무역협정을 만들 것인지 등을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는 회원국이 결정해야 한다.

3) TPP 출범 이후 경제 환경 전망

현재 논의되는 여러 다자 간 거대자유무역협정 중에서는 협상 타결에 이어 협정문 서명까지 마친 TPP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개별 회원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남겨둔 상태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선거 일정 등으로 연내 비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지만, 아직 협상 타결에도 이르지 못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등에 비해서는 월등히 앞서 있다. 또한, 실제 비준 및 발효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대부분 기업을 비롯한 경

제주체는 의사결정을 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TPP 출범이 초래할 변화를 미리 살펴보고 그에 걸맞은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한 예로, 글로벌가치사슬이 세분되고 부가가치가 큰 산업일수록 TPP 참여국은 글로벌 분업구조 재편 경쟁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국가와 손잡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가별 분업 없이 온전히 그 나라 내에서만 만들어진다면 별 차이가 없지만,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확대로 다양한 국적의 중간재가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 특히 TPP처럼 자원, 노동, 기술, 시장 등 다양한 특징점을 보유한 보완적인 국가끼리의 경제통합체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예상되는 변화는 개방 수준의 질적 제고이다. TPP는 기존의 무역협정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관세 양허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해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자유화를 강조하고 있다. 협상에 참여한 회원국은 이와 같은 TPP의 목표를 반영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등을 TPP 협정의 주요 항목으로 포함했다.

상품 관세 양허 측면을 보더라도, 최종 자유화 품목이 95~100%에 이를 정도로 개방 수준이 높다. 국가별 민감도가 높은 제품의 경우 유예기간이 길어 실제 효과는 발효 후 5~10년 차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부분 제품이 즉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많은 산업이 경쟁 환경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의 대미수출액 중 50% 이상이 관세부과 대상 품목에 해당하고, 이는 TPP 국가 중 최대 규모여서 관세 효과 측면에서는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에는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일례로, TPP가 발효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본의 자동차부품

의 87.4%(품목 수 기준)가 즉시 관세철폐가 된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준(83%)을 웃도는 것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규제 완화와 철폐 등을 포함한 비관세장벽의 해소 노력도 두드러져 각종 규제로 그간 해외진출에 난항을 겪은 금융, 통신,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서비스 산업은 내수 중심의 성격이 강했고, 관련 제도와 규제가 엄격해 해외진출이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TPP 출범으로 서비스기업의 해외 사업이 용이해지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비스부문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 일부 국가의 경우 TPP 발효 이후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TPP가 추구하는 이런 변화는 공정한 기회와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협정문 가운데 중소기업 관련 사항을 다룬 부분(chapter)에서는 당사국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련 정보지원 강화, 서류 및 통관 절차 간소화, 수출상담,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이 TPP의 실질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역내 중소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기반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정부 역할이 줄어들고 기업의 책임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불필요한 장벽 해소와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다. TPP는 이를 위해 사전 규제(positive rule) 방식에서 사후 규제(negative rule) 방식으로 전환을 강조한다. 사후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뜻하는 사전 규제에 비해 자율화 허용 폭이 훨씬 큰 규제 방식이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TPP 회원국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사전 규제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

〈표2〉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없는 TPP 조항

TPP 조항	주요 내용
기업인의 일시 입국	- 역내 기업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
국영기업	-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 위해 차별 없는 대우 보장 - 상대국 제소 시 분쟁절차를 밟을 수 있음
협력 및 역량 강화	- 다양한 경제수준의 국가가 TPP 협정을 원활히 이행하고 협정의 이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함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 각 당사국과 아태지역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 - 중소기업의 역내 글로벌기차사슬 참여 기회 확대에 주안점
개발	- 회원국의 개발과 장기적인 경제 발전 도모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여성의 경제개발 참여, 교육 및 과학기술 등 경제개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TPP의 실질적 혜택을 향유하도록 보장
규제조화	- 당사국간 국내 규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일반 원칙을 정하고 협력하도록 권고

자료: 「TPP 협정문 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11

과의 기존 서비스 무역에 대해 사전 규제 방식을 채택 중이나 TPP 발효로 사후 규제 방식이 도입되면 자유화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규제완화와 더불어, TPP는 여러 항목에서 ‘일반 원칙’의 준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이나 기업을 배타적으로 보호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원칙’, 즉 국내경제 안정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상당수가 효력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것이 각국 환율정책이다. TPP 12개 회원국은 수출에 유리한 통화 하락 유도 자제, TPP 회원국에 환율개입 실태 공개, IMF의 외환보유액 통계작성 참여 의무화, 최소 3개월마다 외환시장에 개입한 상황 공

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 공동선언’을 공표했다. 물론, 협정문의 공식 조항이 아닌 공동선언 형식으로 발표되어 구속력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으나, 기존 무역협정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던 정부의 환율개입 문제와 이에 대한 규제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TPP 협정문에서 환율과 더불어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조항 중 대표적인 것으로 국영기업 관련 항목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기존 자유무역협정에는 없던 내용으로, 국영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관련 우선권 등 상업적 경쟁을 왜곡하는 어떤 특혜도 부여하지 못하게 한다. 또, 국영기업이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영기업이나 지정독점 기관⁵⁾이 상품 및 서비스를 사거나 팔 때 국내외 기업을 차별 없이 대우하고, 통상적인 민간 기업의 영업 관행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는 상업적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인 동시에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정부 역할을 축소해나가는 절차이기도 하다.

TPP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정부의 규제나 간섭을 최소화 하는 입장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자율성을 일정 부분 제약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존재한다. TPP 협정문이 기존의 다른 투자 협정과 달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해서 규정한 것이다. 물론, 강력한 수준의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기업의 책임 때문에 기업 활동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TPP 출범을 계기로 회원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 과거에는 다루지 않던 다양한 부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다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 지정독점(Designated Monopoly) 기관이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정부에 의해 상품·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기관을 일컫는다.

세 번째 변화는 기업의 중국 전략 재조정 필요성이다. TPP 출범 이후 중국 활용 전략에 대해서는 산업별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고, TPP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의 입장이 엇갈린다.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조립 등 단순 공정을 중심으로 베트남 등 역내 신흥국가와 중국의 생산 분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공정에서는 탈중국화가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다. 반면, 전기자동차, 우주항공 등 미래 혁신 산업 분야에서는 TPP 내 선진국과 중국 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의 제조업 발전 모델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⁶⁾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상황 이어서 중국과 독일이 기술 개발과 표준 선점을 위해 공동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는 곧 미국과 유럽이 양분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향후 중국의 행보도 중요하다. 그 실마리 중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때마다 TPP 협상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 가능성이 커지자 곧이어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했고,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⁷⁾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서두르면서 TPP 협상 속도가 빨라져 마침내 타결에 이른 것처럼 중국 역시 미국이나 일본의 움직임에 모종의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소 극단적인 예이지만, 중국이 TPP에 참여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TPP는 배타적으로 단혀 있는 경제블록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자유화를 높이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지향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든 TPP에서 요구하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수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유롭게 참

6)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은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 IT 기술이나 시스템을 결합하여 인텔리전트한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7)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지역을 육로(一帶)와 해로(一路)로 연결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발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TPP 회원국이 합의한 국유기업과 규제의 투명성, 지적 재산권, 중소기업, 노동 및 환경 관련 규범 등이 중국 정부가 성장 정책의 뒷에 빠지지 않기 위해 추진 중인 신창타이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다만, 과거 중국이 WTO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도 십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선불리 가입을 검토하기보다 당분간은 ‘무시 또는 무관심 전략’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ASEAN+3(한, 중, 일) 중심의 동아시아 협력을 공고히 하고, 한국이나 아세안 등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인접 국가와 경제통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업종마다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진입 장벽이 낮아 후발국 기업이 바짝 따라붙은 업종은 타격이 크겠지만, 이미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의 기업은 별걱정을 하지 않는 눈치다. 오히려 베트남 등이 TPP 활용을 위한 아시아의 새로운 생산지 허브로 부상하면 중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이 더 늘어나리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네 번째로, 사업 형태와 영역 변화로 신흥 강자 출현을 기대할만하다. TPP를 계기로 사업 형태나 아이템에 대한 사전 규제가 사라지고 참여국 간 제도 및 경쟁 환경의 격차가 해소되면 실리콘밸리 등 선진국 일부 지역 중심으로 편중된 창업 붐, 즉 새로운 사업과 기술의 출현 및 융합 움직임이 TPP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실리콘밸리나 뉴욕의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유출과 불공정 경쟁의 우려만 불식시킬 수 있다면 멕시코, 칠레, 베트남 등으로 이전을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사업 형태 면에서도 재정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의 전통적 제조 기업을

8) 신창타이(新常態)는 ‘새로운 정상 상태’(New Normal) 또는 ‘새로운 기준’이라는 뜻이다.

대신해 소프트웨어 역량이 있는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거나 신흥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 아울러 경쟁력의 핵심이 제품 하드웨어에서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주도하는 소프트웨어로 옮겨 가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제조업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필요하다. 타사와 협업에 의한 제조가 활발해진다거나 최종재 생산업체보다 핵심부품 공급업체의 가치가 더 부각되는 상황도 생각해볼 만하다.

기술 발전과 국가 간 규제 장벽 해소로 지리적 한계 역시 큰 의미가 없어진다. 소매업 진출, 해외직구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확대로 이어졌듯이, 국내 수요 중심으로 발전해 온 서비스 업종의 무대가 글로벌로 확대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미국에 진출한 일본계 편의점을 통해 일본 은행이 미국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호주 게임 회사와 베트남 엔지니어, 미국 디자이너가 함께 게임을 만들어 공급하는 협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처럼 미개척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신흥 유망 기업이 지리적 제약이나 제도적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국경을 넘어 활발히 사업을 벌이면 이는 TPP 전체의 성장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III. TPP 이후 라틴아메리카 경제환경 변화 전망

1) TPP와 라틴아메리카 경제

TPP 출범은 라틴아메리카 각국 경제 및 기업의 사업 환경에도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통상질서 재편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주어진 상황과 대응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글로벌가치사슬이 바뀌면서 만들어진 흐름인 만큼 각국, 혹은 개별 기업이 이 가치사슬의 어디쯤 위치하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조건을 어떻게 극복하거나 활용하는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사

못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첫 번째 기준은 시장접근 측면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다. 수출입 관련 환경 변화를 비롯해 국가별 시장 잠재력, 즉 경제 규모,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비롯해 역내외 국가 간 무역 전환 가능성도 확인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TPP를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역내 회원국은 일차적으로 시장 접근 개선이란 특혜를 누리게 되고, 이는 곧 무역 전환(trade conversion) 효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콜롬비아나 에콰도르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던 미국, 일본, 호주 기업이 페루와 칠레 쪽으로 수입선을 바꿀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두 번째 기준은 생산 분업 측면에서 바라보는 방식이다. 효율적인 생산 분업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 인프라 등 국가별 비교우위 요소를 파악한 후 수출입 품목 구성과 누적 원산지 규정 충족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또,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화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주요 수출 품목, 해외생산 비중 등의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 TPP 회원국은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 가깝고 스페인어라는 동일 언어를 사용하며, 태평양을 활용한 해운 물류 인프라를 갖추는 등 글로벌가치사슬 다각화에 유리한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 좋은 예다.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생산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다.

시장 접근에 대한 영향은 아직 개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던 국가와 무역 보완성이 높은 나라들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는 무역 전환 효과가 먼저 나타나겠지만, 미국·호주·페루 사이에서 진행 중인 제약 산업 협력 논의처럼 TPP 참여국끼리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확장적 글로벌가치사슬을 구성하거나, 멕시코와 베트남같이 일부나마 비교우위가 유사한 국가의 기업이 경쟁을 통해 수평적 통합에 성공한다면 무역 창출(trade creation) 효과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 확대도 가능하다.

사업 환경 측면에서는 주력 산업의 특성과 경쟁 우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무역전환이 손쉽게 이뤄지는 업종에서 충격이 먼저 발생하는 만큼 시장 접근에 유리한 회원국 중심으로 역내 생산지 전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브라질이나 콜롬비아처럼 현재는 TPP 회원국이 아니나 차기 가입국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나라가 적지 않아 선발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각국의 향후 이해관계와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다.

생산 분업 측면에서 나타날 영향이나 라틴아메리카 회원국이 품는 기대도 다양하다. 멕시코는 TPP 출범을 계기로 제조업 부흥과 고도화를 꿈꾸고, 페루의 목표는 농업의 수출산업화와 더불어 제약 산업 참여, 자원산업의 고부가가치화다. 칠레 역시 서비스 수출 확대와 더불어 농업과 자원 관련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멕시코처럼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 제조업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춰진 국가는 제조업 부활 등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여지가 크다는 긍정론과 글로벌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 즉 낮은 기술 수준과 노동생산성 한계로 저부가가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 비춰볼 때 각고의 노력 없이는 상향 이동이 쉽지 않으리라는 비관적 전망이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글로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멕시코로 생산기지 이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론이 조금 더 우세하다. 페루와 칠레처럼 일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희망하는 국가는 협정문에서 합의한 제도 및 규범의 선진화를 서둘러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TPP 역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협력 파트너와 기술협력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역내 선진국의 경우, 앞선 기술은 갖고 있지만 대규모 자원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TPP 회원국 중 7개국이 승용차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7개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 연간 2천7백만 대(2014년 기준, 전 세계

생산의 3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어서 역내외 국가 간 무역 전환뿐 아니라 일정 시간이 흐르면 경쟁을 통한 무역창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TPP의 최대 무기인 누적원산지 규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다층적인 글로벌가치사슬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전체 생산 공정이 한 나라 내에서 이뤄지거나 물류비용 부담이 큰 업종, 이미 TPP 역내 국가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충분히 높은 부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역외의 국가 중에서 TPP 타결의 최대 수혜자가 일본이라는 지적이 많다. ‘TPP는 미·일 자유무역협정이나 마찬가지로’라는 일부 통상 전문가의 주장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자국 통상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성사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최근 일본 기업의 이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글로벌 생산 분업 네트워크까지 덤으로 얻었다.

미국 입장에서도 꽤 수익률이 높은 협상이었다. 상품시장 개방 면에서는 기존에 체결한 양자 자유무역협정과 큰 차이가 없지만 국유기업, 중소기업, 노동 및 환경, 환율 등 그동안 미국 기업이 줄곧 지적해온 불공정 경쟁의 원인과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협정문에 다수 포함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중국 쪽으로 기울어 가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질서의 무게 중심을 다시 돌이키는 초석을 마련했고,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큰 약점으로 꼽혀 온 ‘아시아 전략 부재’ 문제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성과 역시 상당하다.

2) 라틴아메리카의 대응

라틴아메리카 각국 정부와 기업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까?

첫째, TPP 가입을 서두르는 국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좋은 예다.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와 칠레, 페루에 미국, 일본 등의 역

내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각종 수입 쿼터나 특혜무역협정을 통해 누려온 상대적 우위를 더는 향유할 수 없고, TPP 회원국이 서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 분업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부담될 수밖에 없다. 즉, 각국의 TPP 참여는 이익 극대화보다 손실 최소화 관점에서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둘째, 제도 개혁 가능성이다. TPP가 요구하는 제도적 환경과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규제 수준 사이에는 아직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복잡하게 얽힌 각종 규제를 해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규제 중심으로 규제 원칙 자체를 바꿔야 한다. 유명무실해진 기업 친화적 제도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물론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사후 규제 환경이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자리 잡아온 시스템인 만큼 각국은 실제 발생할 손실과 편익 규모, 국민과 기업들이 감당할만한 변화 수준 등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셋째, 미래형 혁신 기업과 국경을 초월한 협력 및 융합이 늘어날 가능성이다. TPP를 통해 국가 간의 제도 및 경쟁 환경의 격차가 해소되고 기술 유출의 우려가 사라지면 실리콘밸리나 뉴욕의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적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라틴아메리카 TPP 회원국으로 사업 이전을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와 라틴아메리카 신흥 혁신 기업이 열어갈 미래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IV. 시사점

그렇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 입장에서 이와 같은 통상질서 개편, 즉 TPP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 간 거대자유무역협정의 부상과 이에 따른 라틴아

메리카 경제의 변화는 어떤 함의를 가질까?

먼저 TPP가 모든 회원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무사히 마치고 발효된다는 것을 전제로 가늠해보는다면, 우리가 페루와 칠레에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누려온 상대적 우위를 더는 향유할 수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더군다나 TPP 회원국이 서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 분업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우리 수출기업에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의 수출상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내 부가가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시켜야 하는 반면,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TPP 회원국의 기업은 누적원산지 규정 덕분에 다른 여러 회원국으로부터 손쉽게 자본재 및 중간재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급 의류,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 등 일본 기업의 글로벌화가 많이 진전된 분야에서 피해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와 기업이 공을 들여온 IT분야를 비롯해 혁신 산업 영역에서 입지를 잃을 우려가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TPP를 통해 회원국 사이에 존재하던 제도 및 경쟁 환경의 격차가 해소되고 기술 유출의 우려가 사라지면 높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으로 고민 중인 미국 디지털 경제의 주역, 즉 실리콘밸리나 뉴욕의 혁신적인 중소기업은 자연스럽게 국외 이전을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TPP 회원국 내 관련 기업과 3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산업 협력의 미래 모습에 대한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아직 라틴아메리카 시장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곧 나타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글로벌가치사슬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우리는 그 사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기존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전통적 제조업 부문의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TPP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같은 다자 간 거대자유무역협정은 혁신적인 미래

형 상품, 서비스 및 디지털 비중이 높은 상품의 교역 자유화를 강조하는 만큼 두 지역 간 산업 협력의 미래 구도나 경쟁우위 분야의 밑그림을 그릴 때도 이런 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규판·이형근·김은지.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14-13,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14년 12월
- 김형주. “일본의 TPP 참가 선언, 동아시아 FTA 환경의 새 변수”.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2011년 11월 22일
- 김형주. “TPP, 미국 주도 경제질서 부화의 신호탄”.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2015년 10월 12일
- 김형주·이지홍. “TPP 이후 주목해야 할 사업환경 변화”.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2016년 3월 3일
- 임부영. “TPP 타결의 對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2015. 11. 04
- 제현정. “무역업계가 바라보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년 6월
- 홍지희. “글로벌 가치사슬이 아시아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Global Value Chain and its implications on Asian countries)”. 제5차 KIEP-IMF 공동 컨퍼런스, 2015년 12월
- 산업통상자원부. “TPP 협정문 설명 자료”. 2015년 11월
- 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최근 동향 및 대응 방향”. 2015년 4월
- 하이통(海通)증권 리포트. “TPP의 여섯 가지 진실”. 2015년 10월 12일
- Aggarwal, Vinod K. “Mega-FTAs and the Trade-Security Nexu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nalysis from the East-West Center No. 123, East-West Center, March 2016
- Fukagawa, Yukiko. “TPP as a Growth Strategy for Japan: Some Implications for Korea”. Presentation at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December 2015
- Kim, Hyung Joo. “Korea, a future member of TPP: Opportunities for Latin American Countries”. IDB Conference (at Lima, Peru), March 2016
- Schott, Jeffrey J. “Korea and the TPP: The Inevitable Partnership”.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ugust 2015
- 미국 USTR TPP 관련 홈페이지 <https://ustr.gov/tpp/>